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요인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양의 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세계 국가가 COVID-19 발발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 당면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양상은 실로 혼란스럽다. 세계 주요국이 COVID-19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는 물가양등의 형태로 2022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취해진 통화정책(금리 인상)으로 2023년 세계 경제는 고비용 구조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sup>1</sup> 글로벌 공급망 위기 촉발은 세계 국가의 경제환경 악화를 초래하였고, 그 파장은 2023년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전반에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전이되고 있다.

한편,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이 급기야 글로벌 경제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양상이며, 기존의 국제 무역구조와 국제 산업별 분업체계에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 원칙과 비교우위의 경쟁력 기반에서 각국의 국가 이익과 이를 위한 연

대 기반으로 국가 관계를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 우호관계는 국가적 실리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당면한 기후위기 상황은 국제 무역 규범에 근원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권의 공조는 이제 구속력 있는 제약(EU CBAM 등)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규제(화석연료 자동차 판매규제 등) 일정도 설정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 규모를 점하고 있는 산업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환경 변화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산업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및 산업계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요인을 우리나라 경제체제 및 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 산업과 소비자는 에너지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제질서 및 무역 규범 변화가 정부의 단기 지원정책이나 시민사회의 활동(에너지절약 운동 등)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능가하는 수준임을 직시해야 하겠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실정에서 매우 빈약한 에너지 자립도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에너지안보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것은 심각한 난관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은 선명하다. 즉, 국제적으로 공약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되, 글로벌 경제·산업 분업구조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위상과 축적된 역량을 유지·발전하는 것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4.10.」은 우리나라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에너지효율을 고도화하여 에너지 수요의 절대적인 수준을 감축하며, 화석에너지 전원구조를 저탄소·무탄소전원(신재생e, 원전, 수소·암모니아, 바이오e 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축이다. 산업부문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 목표도 일부 조정되어 반영되어 있다.

2023년 이후 우리 경제가 막대한 규모(세계 8위, 2021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국가·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후변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즉, 정부는 글로벌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여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격기능에 의한 유인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골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사회적 부담을 경제주체 모두가 다양한 형태(에너지 원가주의 적용, 에너지 소비세 적정 부여, 배출권 거래제 확대, 탄소세 적용 등)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을 확충, 원전의 적정 역할 제고를 위한 기술적 요건 확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개발 조기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강화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정책대안이 총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IPCC 6차 보고서의 정책권고가 이를 반증한다. 또한 단시간 내에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대안 부재를 고려할 때, 에너지 신산업 개척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하겠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상당 기간 배출될 수밖에 없는 온실가스 처리를 위하여, 기존 에너지산업 및 신규 에너지산업 진출자는 온실가스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에너지산업 영역을 개척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저탄소에너지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미래 저탄소에너지 신시장에서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저탄소에너지 기술개발은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 화석에너지 경제체제의 폐해 보정, 국제 기후변화 협약 대응, 우리나라 기술개발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차세대 블루 오션(Blue Ocean)임은 부정에 여지가 없다. 이에 산업계는 전통 에너지 공급시장의 한계성을 냉정히 인지하고 무엇보다 저탄소에너지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공급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만이 다가오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환경에서 승자로 등극할 수 있는 묘책임을 인지해야 하겠다. 정부는 탄소저감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R&D를 확대하고, 신규 에너지기술 산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에너지 신기술 산업에 신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개발에 주력해야 하겠다.